

정부, 가상통화 단속·처벌 강화

검·경, 가상통화 관련 중대 위법행위 원칙적 구속수사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 등 금지

정부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통화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

을 조사할 때는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엄단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범죄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객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적인유출을 제재하도록 하고 입

국 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강한 중소기업으로 도약 하자”

벤처혁신지구 기업지원 성과보고·교류회 개최

지역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전주 중소·벤처 기업들이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강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해나가기로 했다. (사)전주벤처기업육성혁신지구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는 1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벤처혁신지구 기업지원 성과보고 및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발전협의회가 올해 한해 지역 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함께했던 지원성과들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근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금속가공 소공인 기업들이 함께 강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힘든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귀감이 되는 오완곤 유니캡 대표 등 10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전라북도지사상, 전주시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11년 창업한 창년창업자인 오완곤 대표는 승합형 캠핑카와 차량용 투포시스템, 차량용 전기 컨트롤 시스템 등 다양한 특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작, 안전하고 편리한 캠핑 및 여가 문화에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민근 기자

정부, 우체국·농협 펀드 판매 허용

정부가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은행 역시 희망할 경우 펀드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수탁고 66%, 회사 수 132%, 임직원 수 53% 등 자산운용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공모·사모펀드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한계점이 나타났다. 분석이다.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등으로 투자자의 신

뢰가 떨어져 수탁고가 감소·정체했으며,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먼저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이지만, 판매사 범위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 등에 공모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뉴스

알바생 10명 중 6명 “연말모임 꺼려진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은 송년회 및 연말모임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 모임으로 나가는 비용이 부담돼서, 혹은 조용히 혼자 연말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전국(대표 최인영)이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회원 2246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생 연말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6명인 62.2%가 송년회 및 연말모임이 “꺼려진다”고 답했으며, 연말모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지출이 부담돼서(48.3%)”라고 말했다.

또 “혼자 조용히 연말을 보내고 싶어서(12.7%)”,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10.9%)”, “과음 등 건강이 걱정돼서(9.2%)”, “취업준비 때문에(6.2%)”, “아르바이트 때문에(5.4%)”, “기타(7.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연말모임을 더 싫어지게 하는 ‘꿀보기 싫은 유형’ 1위에는 “남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유형(31.0%)”이 뽑혔다. 이어 “억지로 술을 권하는 유형(20.9%)”,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유형(14.2%)”, “약속을 동시에 잡아 늦게 오거나 자리를 일찍 뜨는 유형(12.5%)”이 각각 2, 3, 4위를 차지했다.

/뉴스

구글코리아, 신입·경력·인턴 개발자 채용

구글코리아는 글로벌 혁신 제품 개발에 참여 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부문 채용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용에서는 검색, 안드로이드, 사물인터넷(IoT), 구글 어시스턴트 등 현재 개발 중인 구글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신입, 경력, 인턴 직군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한다.

구글코리아 엔지니어링팀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모집한다. 구글코리아 엔지니어링팀은 그동안 검색 서비스 중 금융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안드로이드 부문 멀티미디어 및 시스템 분야,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및 구글 어시스턴트의 검색 연동 기능

개발 등에 집중해왔다.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정보를 연결하고, 탐색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탐색해 정의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는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빠른 학습력을 가진 지원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구글 코리아는 전했다.

/뉴스

10만원 이하 우리농산물 ‘착한선물’ 스티커 도입

농식품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후속대책 마련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증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 ‘착한선물 스티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 우리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만큼 선물 가액 인상이 국내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에서 농축수산물 원·재료로 50%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졌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와 협의해 가장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내년 설 명절 이전에 각 판매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화폐의 경우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폐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폐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관매코너를 확대해 올해 2000개에서 내년엔 3200개까지 확대한다.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꽃(1table-flower)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참여기업 78개에서 내년에는 300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폐의 품질 지속 기간을 늘리기 위해 습식유형을 지원하고,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맞춤형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의 경우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동시에 사과·배 등 6세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보급과 품종갱신 사업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이번 김영란법 개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우·인삼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의 경우 비선부위를 활용한 가정간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하여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삼제품도 1회용 흡삼캡슐, 1주이용 흡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